

# CONSTRUCTION NEWS

## 현장 환경관리조직 설치 의무화

### 건교부, 전담인력 별도 배치

**환** 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에 별도의 환경관리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인원이 늘어나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대신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상향 조정도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환경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과 품질관리 전담자 외에 환경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설현장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소장이 책임자를 대신하고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인력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돼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은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공사장의 환경관리에 노력

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건설·개발은 환경과 배치된다는 이분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환경관리 책임자 조직을 뒤 보다 친환경적으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을 고려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리조직은 공사 규모별로 차등화해 배치하며 구체적인 배치인원 등은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처럼 환경관리조직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 관리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며 도로 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의 0.9% 이상 등으로 규정된 환경관리비 계상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 전문건설업계 유동성 개선

### 9911사 중 68% 'C-등급 이상'

**지** 난해 국내 건설투자는 2000년대 들어 최저치인 0.4% 증가에 그치는 등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졌으나 전문건설업계의 유동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한국

기업인증은 지난해 전문건설업계의 현금흐름 등급을 산정한 결과 9,911개 평가업체 가운데 68%에 달하는 6,732개사가 C-이상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의 64%(8,677개 업체 중 5,550개)보다 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기업인증에 따르면 C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급'으로 대부분 원도급 업체들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과 기존 협력업체 재평가 시 이를 최저 등급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호한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B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업체도 지난 2004년 전체의 19%에서 지난해 22%로 3%포인트 증가했으며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A등급을 얻은 업체도 2004년 468개사(5.3%)에서 작년에는 580개사(5.9%)로 늘어났다.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는 E 등급 업체는 2004년 690개사(8%)에서 지난해에는 650개사(6.6%)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반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원도급사들이 신용등급과 현금흐름 등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퇴출시키다 보니 전문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무제표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제표가 만 3년 동안 없어 한국 기업인증이 현금흐름 등급을 산정할 수 없



는 업체 수가 지난해 1,021개에 달하는 등 건설업 침체와 달리 전문건설업계의 신규 업체 수 증가율은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현장에 부실벌점 주의보

### 제도강화 추세...현장 단속 나서

**건**설현장에 부실벌점 주의보가 내려졌다.

부실벌점제도가 한층 강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부실벌점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최근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폐지하고 산정방법을 현행 발주기관 평균에서 발주기관 누적합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들 내용 가운데 산정방법의 변경은 이미 지난해 말 부실벌점 운영요령에 포함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건교부는 법제화를 위해 이번에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 △ 얼마나 강화되나

다수의 공사현장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종전보다 3~4

배나 많은 부실벌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청 3개 현장(A, B, C), 원주청 2개 현장(D, E), 대전청 1개 현장(F) 등 3개 발주기관에서 6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반기에 A현장 3점, B현장 4점, C현장 2점, D현장 2점, E현장 4점, F현장 2점 등의 부실벌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평균 부실벌점이 2.83점에 불과하지만 바뀐 방법에 의하면 8점에 이른다.

종전 방법으로는 6개 현장의 누적점수인 17점을 6으로 나눈 값이 평균 부실벌점인데 반해 바뀐 방법에 따르면 서울청 3점(3+4+2)/3, 원주청 3점(2+4)/2, 대전청 2점(21) 등을 합해 8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적용, 우수업자 선정 등에 따라 1~3점의 부실벌점을 줄일 수 있는 경감 기준까지 없어지게 되면 현장에서 받는 부실벌점은 고스란히 입찰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실벌점제도의 강화는 이번만이 아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현장단위 부실벌점을 점검횟수 대신 공사건수로 나누는 식으로 산정방법을 강화했고 또한 부실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에 대해서 PQ감점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PQ감점 업체 수는 종전 3개사에서 28개사로 늘었다.

#### △ 부실벌점 불이익은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양하면서도 심각하다.

2년간 부실벌점의 누계점수가 20점 초과 50점 이하이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당한다.

이를 넘어서 50점 초과 100점 이하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제한을 받고 100점을 초과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공공공사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

또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0.2점의 감점을 받고 2점부터는 점수별 구간에 따라 최고 5점까지 불이익을 당한다.

시공능력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부실벌점이 2점 이상이면 시공능력평가에서 최소 1점에서 3점의 감점을 받는다.

#### △ 경계경보 발령

건설업체들은 각 현장에 공문을 보내 부실벌점을 받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강화된 부실벌점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업체들의 누적 부실벌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벌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부실벌점제도의 강화가 과잉규제에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 CONSTRUCTION NEWS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여러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부실벌점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 위반 중복처벌 못한다

### 건교부,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동** 일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복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처분 금지조항을 담아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법과 하도급법은 도급계약을 서로 계약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선급금 미지급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계약서로 계약하지 않는 등의 행위, 선급금 미지급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계약서로 계약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건설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처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건설업계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고 중복처분이 실제로 발생하는 않고 있다면서도 중복처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감안, 지침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건설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야 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 지침은 최근 3년 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이 미달돼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예시문을 신설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보증기능금액, 사무실 등 시설·장비, 기술자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자본금 미달로 처분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이 자본금 미달로 적발된 경우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미달 처분 후 3년 이내에 기술자 부족으로 처분받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 공사 견적능력을 높여라

### 업계, 최저가 ‘주관적 심사’ 대비

**최** 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맞춰 입찰심사 평가에 주관적 심사 항목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견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적용돼온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제도가 주관적 심사를 가미한 방식으로 보완될 경우 견적능력이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몇몇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덜 가졌던 상당수 건설업체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관적 심사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시설공사의 입찰심사 고정에서 가격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공사비 절감 사유를 발주자가 판단해 낙찰여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 상의 한 항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내용을 입찰참가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소화하느냐가 수주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입찰제도 개선 내용 중 주관적 심사 때 설계변경을 허용할지가 최대의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



경이 부분적으로라도 심사 대상에 반영될 경우 업체의 건적능력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내역서 작성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거나 외주방식으로 해결해온 건설업체들은 실무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을 뽑아 건적팀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구권에 소재한 한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적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주업체에 입찰에 필요한 내역서 작성을 맡겨왔으나 이번 제도개선 움직임을 계기로 자체 기술진을 활용하기로 하고 인원을 보강, 공무부서에 건적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기술심사팀 이종기 사무관은 “주관적 심사항목이 신설될 경우 업체의 건적능력이 낙찰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그동안 외주를 통해 내역서를 작성해 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사만의 확실한 원가절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기술능력을 키워야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건적을 대항해 주는 외주업체들은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외주업체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판에 박은 듯한 건적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무기로 맞춤형 내역서 작성을 해주는 대신 높은 대행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2등급 이하 업체들은 건적능력이 높은 대형업체들과 유착해 또 다른 형태의 공동도급 관행을 만들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해외플랜트 수주 1분기 63억달러

### 플랜트협, 가파른 상승세 지속

지난 1분기 해외플랜트 수주량이 전년 동기대비 1.6배인 63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158억달러 수주달성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총 200억달러의 수주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고유가 기조와 해외자원개발 경쟁이 지속되면서 1분기 수주 누계치가 6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수주실적은 해양플랜트와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오일·가스 생산 및 처리시설, 발전 및 담수플랜트 등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동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미주지역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미국 등 오일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중동·아프리카(48% 점유) 중심에서 유럽·미주(41%)의

수주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회 측은 우리 업체가 경쟁력 확보와 물량증가에 힘입어 수익성이 확보된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수주, 플랜트업체의 자금 수지와 국내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까지 수주한 52개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이 25개를 수주, 건수 기준으로 중소기업 점유율이 48%에 이른 것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년동기 13개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 7개사가 수주한 데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 및 전략수립 능력이 제고됐음을 반증한다는 것.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당 평균 수주금액도 작년 3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향후 수주추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국가들의 발주물량이 증가하는 데다 아시아 내 발주물량도 꾸준히 증가, 향후 수주비중은 중동·아프리카의 우세속에 기타지역의 균형있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해양플랜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데 반해 자원확보 경쟁기조에 따라 작년부터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등과 함께 주력 수출플랜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CONSTRUCTION NEWS

## 1분기 해외 플랜트 주요 수주 실적

구분	지역별 수주금액 (백만불)	주요플랜트			
		업체	프로젝트	금액 (백만불)	발주국
유럽	2,031	대우조선해양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407	노르웨이
		대우조선해양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495	노르웨이
		삼성중공업	DrillShip	453	노르웨이
		풍림산업	DrillShip	553	스웨덴
		풍림산업	BS2 Compression 프로젝트 Exxon 원유수출기지	70 53	러시아 러시아
중동	1,699	SK건설	PIC Aromatics	1,227	쿠웨이트
		한전	디아르아마르 및 자르니 발전소 O&M	86	레바논
		두산중공업	소하르 민자담수발전	65	오만
		포스코건설	이란 SAMANGAN DRI/제강	321	이란
아프 리카	1,209	대우건설	Eastern Gas Gathering Sys. II	92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Gbaran-Ubie Integrated Oil and Gas PJT	875	나이지리아
		삼성중공업	TAKULA 플랫폼 프로젝트	242	나이지리아
아시아	565	삼성중공업	해양플랫폼	289	인도
		로케트전기	전지합체설비	99	중국
		대림산업	Petron PetroFCC Project	199	필리핀
미주	591	대우조선	DrillShip	467	미국
		LS전선	345KV송전케이블	60	미국
		두산중공업	Palo Verde 1,2,3 RVH&CEDM	64	미국
계	6,095			6,095	

## 초중고 74교 14건으로 번들링

### 서울교육청, 올 BTL사업 유관

**정**도초등학교와 구촌초등학교 등 서울 시내 초·중·고 74개교가 14개 단위사업으로 묶여 신·개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내역을 잠정 확정하고 총 74개교를 14개 단위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정도초 외 5개교를 비롯해 △상림초 외 2개교 △고척초 외 3개교 △신상계초 외 4개교 △광장초 외 6개교 △경도초 외 7개교 등으로 2~7개 학교가 1개의 단위사업으로 묶였다.

사업비의 경우 적게는 3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에 달한다.



상림초 외 2개교 신축사업의 사업비가 321억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목운초 외 5개교 신축사업이 8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지와 관련, 신축사업인 구촌초와 인왕중, 미양중 등 8개교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미사리초와 수명중, 장지중 등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12개교는 연말까지 부지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잠일초와 면목초 등 개축사업과 신현고 등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정도초 외 5개교를 시작으로 5월부터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오는 5월까지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대상사업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 최종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사업별(Bundling 단위)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연면적 합계(m <sup>2</sup> )	사업비 합계(억원)	사업자 모집공고
정도초 외 5개교	'07.02 ~ '08.07	59,074	59,370	5
구촌초 외 5개교	'07.02 ~ '09.01	64,376	71,850	6
목운초 외 5개교	'07.02 ~ '09.01	72,969	81,235	6
상림초 외 2개교	'07.03 ~ '09.01	31,965	32,125	7
면목초 외 4개교	'07.05 ~ '09.01	60,497	60,797	9
전농초 외 4개교	'07.05 ~ '09.01	50,351	50,600	9
금화초 외 5개교	'07.05 ~ '09.01	47,446	47,680	9
고척초 외 3개교	'07.05 ~ '09.01	40,744	40,946	9
신상계초 외 4개교	'07.05 ~ '09.01	58,037	58,324	9
봉천초 외 3개교	'07.05 ~ '09.01	55,501	55,777	9
신동초 외 5개교	'07.05 ~ '09.01	47,700	45,926	9
거여초 외 3개교	'07.05 ~ '09.01	40,535	40,736	9
광장초 외 6개교	'07.05 ~ '09.01	52,593	52,853	9
경동고 외 7개교	'07.05 ~ '09.01	52,017	54,088	9

#### 조달청, 공사계약팀 시설총괄팀으로 개명

**조**달청은 시설사업본부 공사계약팀 이름을 시설총괄팀을 바꾸는 등 일부 부서에 대한 명칭을 개명했다.

이밖에 물자관리팀→물품관리팀, 원자

재수급관리팀→원자재총괄팀, 원자재비축관리팀→원자재비축팀, 국가기관외자팀→외자장비팀, 공공기관외자팀→외자기기팀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됐다.